

생산자단체가 주도한 계열화생산

김정주 / 건국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1. 계열화 생산체계의 효과

육계산업의 완전계열화 생산을 통하여 단계별 최종 소비자 가격을 조사하고 이를 단독경영에 의하여 생산된 계육 및 닭고기요리의 시장가격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양계 계열화 생산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4개 계열주체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수하지 못한 자료는 20~30%의 마진을 인정하여 도소매가격을 추산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가격을 실제가격과 비교해 보면 병아리의 경우 실제가격을 기준하여 40.6%~35.6%를 절감할 수 있고 생닭의 경우 27.2%~21.1%, 도계육의 경우 도매단계에서 42.7%~37.9%, 소매단계에서 45.4%~40.9%를 절감할 수 있으며 닭고기 요리(양념통닭이나 후라이드치킨)을 최종 소비재로 간주할 경우 현재가격을 기준하여 54.5%~50.7%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상의 계산은 각 유통단계의 가격중 중간치를 적용한 것인데 만일 최소 가격과 최대 가격을 적용했을 경우 절감가능성은 달라진다. 즉 병아리의 경우 26.2%~48.0% 범위내에서 절감이 가능하고 생닭의 경우는 12.6%~34.8%, 도계육 도매가격의 경우는

31.2%~49.1%, 도계육 소매가격의 경우는 34.5%~51.5%, 닭고기의 경우는 45.5%~59.4% 범위내에서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요컨대 계열화 생산을 통하여 최종소비자 가격을 기준한 절감가능성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소비행태가 가장 일반화된 도계육 소매단계 중간가격에 20% 마진을 적용할 경우 실제가격을 기준하여 45.41%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계육의 관세 상당치(국내외 가격차의 100% 상당액)가 41%인 점을 감안하면 육계계열화가 정착될 경우 충분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2. 계열생산 체계 전개 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어느 제도를 막론하고 문제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그 문제가 개선할 여지가 있는나가 보다 중요하다. 앞의 설문조사나 계열화생산 관련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계열화 생산에 있어서 대두되는 중요한 첫번째 문

제는 생산을 담당하는 농가가 경영체에 예속되는 것처럼 되어 마치 봉건시대의 소작제도를 부활시킨 것처럼 느껴진다는 농가가 다소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리의 원천은 그동안 우리나라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계열화 생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렸던 횡포 사례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나라 농촌에서 자행되었던 약덕 지주들의 소작인 착취행위가 연상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사실로부터 막연히 느껴지는 감정(미국에서는 이를 농업의 감상주의(Agrarian Sentimentalism)라고 말한다) 때문에 현재의 시급한 문제 해결을 주저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농가가 경영체와 계약과정에서 부당하게 대접받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적극적인 자세가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나 협동조합이 계열화 생산의 계약과정에 깊이 관여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일, 경영체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일, 세제를 개선하는 일, 농가에게 필요한 시설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일 등을 맡아줌으로써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민이 살아남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경영체와 사육농가 사이의 계약이 부당하게 이루어졌음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면 농가는 계열화 생산으로부터 즉시 탈퇴하여 독자적인 경영체제로 전환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는 신분적인 예속이 아니므로 재계약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쉽게 탈퇴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축산물의 계열화 생산을 시작할 때 이러한 감상주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실리주의 생활태도로 이를 극복하고 지금은 축산물의 대부분이 계열화 생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로 계열화 생산의 문제가 되는 것은 사육수료를 기본사육비와 능률급으로 구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나 하는 점이다.

계약사육에 의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할 목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성과급 제도는 사육농가의 생산성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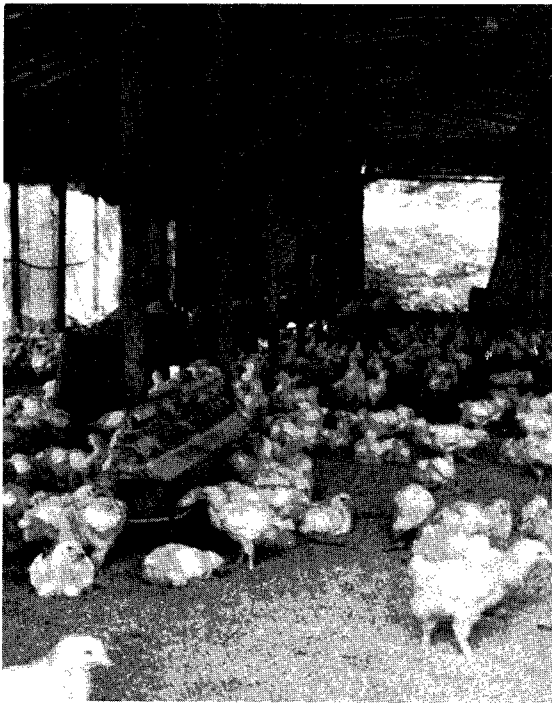
상을 위한 유인책으로써 좋은 방법이다. 평가기준이 되는 사료요구율이나, 생존율 등이 경영체 주체와 사육농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는 양자간 분쟁의 여지는 상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약추나 저급사료에 의한 생존율, 사료요구율 시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수준을 정함에 있어 품종별, 계절별, 사료별 지표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50~100g 단위로 되어 있는 현재의 사료요구율의 기준을 보다 세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를 세분화한다고 해서 경영주체나 사육농가 어느 일방이 불리해지거나 유리해지지도 않는다면 불확실한 내용을 두고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어느 일방만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면서 분쟁의 여지만 남기기 때문이다.

셋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영주체와 사육농가간의 성실한 계약이행이 보장될 수 있는 장치가 문서화된 계약서 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양계산업의 경기가 침체될수록 계약불이행의 여지는 더욱 많아져서 사육농가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계열화 생산에서 농가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는 정작 수천만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계열화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보다는 주변의 지식인층으로부터 보다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명분론에 충실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영체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농가가 계약에 충실하지 않을까를 염려할 수도 있다. 실제로 계열화 생산의 선두주자격인 몇 회사가 도산했던 사례가 있다. 이는 사육농가측에서 생산물의 시세가 좋으면 임의로 제3자에게 판매하고 시세가 나쁘면 제3자의 생산물을 구입하여 추가시킴으로써 경영체의 수지가 악화된 결과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농민의 의식수준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 높아져 이러



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경영체와 사육농가간의 문서화된 계약서 보다는 회복된 신뢰를 바탕으로 공생공존한다는 협동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끝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열화 생산을 기업이 주도할 것이냐 아니면 협동조합이 주도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만일 협동조합이 계열화 생산을 주도한다면 앞서 말한 농업의 감상주의도 자본가의 착취문제도 자연히 소멸될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 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과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과연 기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경영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협동조합의 운영에 관해서는 논쟁이 없지 않으나 협동조합의 경영체제로서의 기능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협동조합을 고도의 경쟁속에서 전문화된 경영기술로 무장한 경영체이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이 정부의 보호막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전문 경영인에 의한 경영합리화에 매진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 한다면 계열화 생산체계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일본이 협동조합을 통한 농축산물 계열화 생산으로 농축산물 수급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오래전부터 농협이나 축협이 농산물 가공산업이나 유통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완전 계열화 생산을 향한 부분적 계열화(Partial integration) 생산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농용자재의 구입, 생산물의 수송, 저장, 가공, 판매는 협동조합이 맡아서 처리해 주는 것이 협동조합의 이상이고, 이것이 바로 계열화 생산의 골격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협동조합의 지도, 구매, 판매, 운송, 가공사업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협동조합을 통한 계열화 생산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가지 분명해진 것은 육계의 계열화생산에 의하여 최종소비재 생산비를 인하시켜 계육이 수입 자유화되어도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양계업을 생업으로 삼는 양계농가는 물론 정부, 농업관련단체, 학계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는다면 양계업의 장래는 밝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서 생산자단체가 주도한 계열화생산을 추진함으로써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은 물론 권익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양계**